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1996. 12.

崔 春 欽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요약

본 연구는 바람직한 대중 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북아 주요 강대국간의 관계발전 추세를 고찰하고, 중국의 대한반도 安保戰略과 대북 안보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한·중 양국간 안보현안들이 停戰協定 유지문제, 4자회담 문제, 북한 核問題와 미사일 개발문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들과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바람직한 韓·中 安保協力の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들이 대북관계 부문, 양자간 안보협력 부문, 다자간 안보협력 부문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1. 脫冷戰期 東北亞 安保環境

脫냉전기의 東北亞 安保環境은 중·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냉전시 美·蘇가 구축하였던 勢力均衡 구도를 대체하는 가시적이고도 안정된 安保秩序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同盟體制의 강화, 중·러간 戰略的 同伴者關係의 구축, 중·일간의 軍備競爭 확대, 미·북 關係改善 등의 요인들로 東北亞 安保秩序는 점차 새로운 형태로 구체화될 것이다.

미국은 介入과 확대전략으로 미군의 해외주둔 國防費 부담을 축소하면서 기존 동맹국들과의 安保協力を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96년 4월 「美·日 新安保共同宣言」은 미·일 同盟關係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의 현 수준동결과 전진배치 전략의 지속을 천명하였다. 일본의 域內 역할증대가 용인되었으며 미·일 관계가 실질적 同盟關係로 격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여

기서 주목할 것은 駐日美軍의 역할이 極東地域 유사시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위협이 대두되거나 韓半島가 불안해질 경우 미·일 동맹군이 이 지역에 介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일 분쟁이 발생될 경우 미국의 介入으로 인해 중·미·일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미·일 同盟強化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安保協力 강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중·러간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였다. 중국의 對러 군사무기 도입 등을 통한 兩國간 安保協力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단기적으로 兩國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러 兩國은 서방 선진국가들의 經濟支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치할 수 있는 전략적 同盟關係로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간의 국방력 강화 의혹과 불신으로 兩國의 軍備競爭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일 兩國 중 어느 국가의 군사력이 東北亞 안정을 더 위태롭게 하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군사력 투사능력 측면에서 볼 때 서로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은 전술,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일본은 實戰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통신과 각종 군사장비 등 많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이 核武裝할 경우, 일본의 군사적 위협은 중국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다.

미·북간 關係改善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대남 군사충돌 억제를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요컨대, 한국과 중국이 처해 있는 東北亞 安保環境의 특징은 첫째, 중·미간 안보 갈등의 지속과 미·북 關係改善이라는 냉전과 탈냉전의 현상이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미·일 同盟體制 강화로 인한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려는 중·러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셋째, 중·일간 軍備競爭이 확대되고 남북한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등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II. 韓·中 安保關係

중국의 安保概念은 걸프전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경제력 증진을 위한 기존의 안보역할을 강조하면서도 情報戰 등과 같은 高技術을 중시하고 있으며 전쟁시 초기단계에서 미리 적의 공격력을 制壓한다는 積極的이고 포괄적인 防禦전략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무엇보다 한반도를 중국안보의 緩衝地帶로 존속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과의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現狀維持를 통한 자국의 영향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국의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우선시하는 데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미국의 대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은 1996년 초 북한에 대한 군사 및 經濟支援을 확대함으로써 북한과의 안보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한·중 兩國은 1950년 한국戰 발발이후 중국이 무력 介入함으로써 敵對關係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1992년 8월 한·중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兩國관계는 정상화되고 善隣友好 관계로 경제협력 부문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兩國간 安保協力이 미약한 것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최우선 시하고 있는 데 있다. 한·중 수교이후 兩國 사이에 초보적인 軍事交流가 시작되었는 바, 1994년 4월 상호 武官 派遣의 합의, 1996년 12월 중국 군사대표단의 첫 방한(1996. 12. 7~12. 14)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韓·中修交 이후 한국의 입장에 대해 선별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중시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안보이익을 얻으려는 戰略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停戰協定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4者會談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과거 核투명성 확보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妥協을 강조하고 있고 IAEA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한국과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공격형 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介入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안정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 중국은 대북 군사교류 및 經濟支援을 통해 兩國관계가 소원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自國과의 경제협력을 중시, 위협적인 安保戰略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II. 東北亞 安保秩序 展望

향후 東北亞 安保秩序의 向方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는 중·미 갈등 지속, 중·일의 경제발전에 따른 軍備競爭, 미·북 관계진전과 이에 따른 한·미 갈등 등이 지적될 수 있으며, 經濟要因들이 安保要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작용할 것이다.

중·미간의 긴장이 쌍방간의 경제적 이유로 인해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展望되나 兩國간 갈등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軍事力 증강이 더욱 확대될 경우,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요구와 이에 따른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독자적 역할 확대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중·일간의 軍備競爭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미관계가 개선되면 심화될 수 있는 중·일간의 軍備競爭은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미국과의 關係改善을 최우선시하여 한국과의 關係改善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對北 관계 개선정책에 확고히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미·북간 關係改善이 예상외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에 한·미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東北亞 國際秩序의 안정에는 미국의 對中 전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東北亞 安保環境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중·미 갈등 지속, 중국과 일본의 軍備競爭, 미·북 關係改善 진전 등이 존재하나, 이 변수들 역시 미국의 對中 전략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IV. 韓·中 安保協力 方案

冷戰終熄 이후 한·중 안보관계는 공동의 國家利益을 바탕으로 새로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장기적으로 미·북관계 진전, 韓半島統一 가능성과 東北亞 新국제질서 형성 등에 대비한 한·중간의 安保協력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한·중간에 이해를 달리는 사안들을 단계적인 협의와 對話를 통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사태에 따라 한반도 안정이 훼손될 가능성을 고려한 安保協力 方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하는 경우, 한국은 적어도 중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중간 전략적 비대칭성이 장기간 존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의 對中 安保協력은 對美 安保協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미관계가 東北亞 安保秩序 형성은 물론 한반도 안정유지에 핵심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균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중·미 갈등을 축소시킬 수 있는 橋梁的 役割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안정에 대한 한·중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간의 安保目標를 명확히 할 수 있는 韓·中 평화우호조약을 兩國 군사대화과 협상을 통해 체결하고 여기에 相互不可侵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은 東北亞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의 東北亞 安保對話 형성을 중국과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중 兩國의 安保協力 세부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중국측에 중·북 동맹조약중 自動 軍事介入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고 북한붕괴로 인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介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兩國간 현역 군인이 참가하는 안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의 유사시를 유념한 西海상에서의 한·중 합동 해상탐색 및 해난 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이 철수하였던 군사정전위 대표단의 귀환을 요청하고,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안정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이 공식 지지해 주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은 「東北亞協力對話」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중국과 함께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 目 次 -

I. 序 論	1
II. 脫冷戰期 東北亞 安保環境	3
1. 美·日 同盟體制 強化	3
2. 中·日間 戰略的 同伴者關係 構築	5
3. 中·日間の 軍備競爭 擴大	8
4. 美·北 關係改善	11
III. 韓·中 安保關係	13
1. 中國의 安保概念과 新戰略敎理	13
2. 中國의 對韓半島 安保戰略과 對北 安保關係	14
가. 中國의 對韓半島 安保戰略	14
나. 中國의 對北 安保關係	16
3. 韓·中關係 現況과 安保懸案	18
가. 兩國關係 現況	18
나. 兩國間 安保懸案	20
IV. 東北亞 安保秩序 展望	31
1. 中·美 葛藤 持續	31
2. 中·日의 經濟發展과 軍備競爭 深化	33
3. 美·北 關係改善과 韓·美 同盟關係 變化	36

V. 韓·中 安保協力 方案	38
1. 基本方向	38
가. 北韓事態 對備	38
나. 對美 安保協力の 補完	39
다. 中·美間 均衡者 役割	40
라. 韓·中 平和友好條約 체결	42
마. 東北亞 平和體制 基盤 構築	43
2. 部門別 推進方案	45
가. 對北 關係 部門	45
나. 兩者間 安保協力 部門	49
다. 多者間 安保協力 部門	51
VI. 結 論	53
참고문헌	56

I. 序 論

구소련의 붕괴이후 세계적인 탈냉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東北亞 安保環境은 域內국가들의 자국 안보이익과 영향력의 확대 모색, 중·미간 긴장 지속, 남북한간의 대립 등으로 불안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김일성 사망이후 미국의 대북 접근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남북한 緊張狀態는 별 다른 완화조짐을 보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조속한 정권안정이 한반도 안정에 유익하다는 입장에서 對北關係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북한의 미국과의 對話先行과 남북대화 기피 등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이후 경제협력의 확대와 兩國 정상간의 교환 방문 등으로 인해 점진적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급변하는 東北亞정세에 대응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兩國간의 安保協力은 한·미, 한·러 安保協力에 비해 현재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同盟關係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의 폭 넓은 安保對話와 협상을 바탕으로 安保協력을 구축하여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비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바람직한 한국의 대중 安保協力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탈냉전기에 들어 한국과 중국이 직면해 있는 安保環境을 東北亞 주요 強大國간의 관계발전 추세와 동북아지역 안정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 한다. 둘째, 탈냉전이후 형성되고 있는 東北亞 安保環境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안보전략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중국 안보·군사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중국의 대북한 안보관계를 고찰한 후 한·중 안보관계를 정전협정 유지문제, 4자회담, 북한 핵문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넷째, 東北亞 安保環境을 展望하고 한·중 兩國이 한반도 안정과 東北亞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安保協力 방안을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II. 脫冷戰期 東北亞 安保環境

탈냉전기 東北亞 安保環境의 특징은 중·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냉전시 미·소가 구축하였던 勢力均衡 구도를 대체하는 가시적이고도 안정된 安保秩序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일 同盟體制의 강화,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 중·일간의 軍備競爭 확대, 미·북 關係改善 등의 요인들로 東北亞 安保秩序는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美·日 同盟體制 強化

미국은 냉전시대에 잠재해 있었던 중국의 군사력 증강추세, 북한의 도발 가능성, 영토분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대두함으로써 東北亞 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인식, 안정유지를 위한 介入과 확대전략(engagement and enlargement strategy)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고¹⁾ 자국의 해외주둔 국방비 부담을 축소시키면서 기존 동맹국과의 安保協力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96년 4월 17일 클린턴 美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총리는 東京 정상회담에서 東北亞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하는 신안보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일 新安保共同宣言」을 채택하였다. 「新安保共同宣言」으로 미·일 同盟關係가 보다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미·일 兩國

1)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PO, July 1994).

은 「新安保共同宣言」을 통해 동아시아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強大 大國들의 핵무기 보유, 한반도정세의 긴장고조, 미해결된 영토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준과 전진배치 전략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선언으로 인한 미·일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미군감축 논의를 중단하고 현 수준의 駐日美軍 47,000명을 포함해²⁾ 아·태지역에 10만명 병력의 전진배치를 공고히 하였다. 둘째, 일본의 域內에서의 군사적 역할증대를 미국이 용인한 것이다. 사실상 신안보선언은 그 동안 일본이 고수하여 온 전수방어,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중 전수방어와 무기수출 3원칙의 효력을 폐기함으로써 일본의 지위가 기존의 미국과의 종속적 同盟關係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분담하는' 同盟關係로 격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新安保共同宣言」으로 인해 주일미군의 역할이 일본지역 유사시에서 極東地域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중국의 위협과 한반도 유사시에 介入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된 점이다.³⁾ 이로 인해 남

2) 주일미군 47,000명 수준의 유지 결의에는 일본 본토에서 떨어진 미해군기지 에서 근무하는 약 13,000명 미해상군(afloat forces)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미군기지내에서 미군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약 5,000명의 민간인들 숫자도 포함되지 않았다. Nicholas D. Kristof, "U.S. Takes Firm Stance On Troop Levels in Japa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2, 1995, p. 1, & 6; 미국의 태평양 전력을 보면, 미7함대는 일본 요코쓰카에 항공모함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평양지역 미총사령관의 지휘 하에 미국 서해안에 5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더 배치되어 있고, 美 제3해병사단은 오키나와에, 제2보병사단은 한국에, 그리고 제7 및 제5공군단은 일본에 배치되어 있다.

3) 민족통일연구원, 「주변4국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1996. 5, pp. 6~9

사군도를 비롯한 남중국 해상에서 중·일간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미국은 중재 입장을 취할 것이다. 1996년 11월 캠프 데이비드 미국방부 부차관보는 중·일 兩國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釣魚臺(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⁴⁾ 중·일 분쟁이 미국의 介入으로 인해 중·미·일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中·러間 戰略的 同伴者關係 構築

중국의 1996년 봄 臺灣海峽상에서의 무력위협 시위와 파키스탄에 대한 M-11 미사일기술과 핵기술 수출 의혹 등으로 중·미간 갈등이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미·일 兩國이 아태지역에서의 安保同盟體制를 강화하고 중국을 잠재위협국으로 목시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중·미간의 安保葛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일 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安保協力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1996년 4월 북경 정상회담에서 兩國關係를 “21세기를 대비해 平等, 상호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것”임을 표방하는 등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의 安保協力關係로 천명하였다.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형성이 가능하였던 것은, 첫째, 兩

참조.

- 4) 캠프 데이비드 부차관보는 “72년 미·일간에 체결된 오키나와 반환협정은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讀賣新聞」, 1996. 11. 28.

國간 국경선 주둔병력 감축협상을 통한⁵⁾ 신뢰구축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 둘째, 동아시아에서 점증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저지할 필요성을 兩國이 공감하였다는 점, 셋째, 중국이 미국 주도하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擴大方案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안보이해의 공감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北京 頂上會談에서 「核擴散 禁止條約」(NPT)의 무기한 연장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체결 및 「化學武器協約」(CWC)의 조기 발효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 및 강권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암시적으로 대만사태 이후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의도를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대러 군사무기 도입을 통한 兩國간 安保協力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이후 중국은 핵미사일 탑재 「夏」급 원자력 잠수함 12척의 진수와 초음속 폭격기 배치에 주력하여 왔으며 1992년부터는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SU)-27 26기, 디젤잠수함 1척, 미사일 防空시스템(S300) 4기 등을 러시아로부터 매입하여 海·空軍力을 증강하여 왔다. 중국은 1996년 4월 頂上會

5) 양국은 1996년 5월 上海會談에서 1991년 5월의 「중·소 동부국경협정」과 1994년 9월의 「중·러 서부국경협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등과 중국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정에 정식 조인함으로써 각국은 접경선에서 100km씩 군대를 철수시켜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중·러간 국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주변4국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pp. 16~8.

談에서도 러시아와 잠수함, 미사일 防水시스템 및 신형공격기 슈퍼7의 공동개발 검토, SU-27의 24기 추가 구매를 통한 중국의 SU-27 전투기의 라이선스 생산에 합의하였다.⁶⁾ 또한 12월에는 55억달러 상당의 SU-27기 55대의 追加 購入이 결정되었는 바,⁷⁾ 러시아무기 도입으로 중국의 해·공군력이 증강되고 있다.

1997년 4월 중·러 兩國 정상이 모스크바회담에서 국경선 부근의 경비병력 감축에 관한 협정에 조인할 것으로 보여 兩國간 신뢰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⁸⁾ 그러나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장기적으로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립할 수 있는 전략적 同盟 關係로까지 발전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兩國은 한반도문제 등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⁹⁾, 무엇보다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6) 이는 The RINU-IFES Workshop on the Security and Peace in the Northeast Asia, Moscow, Russia, June 27~28, 1996에서 V.S. Miasnikov 박사가 밝힌 내용이다.

7) 「世界日報」, 1996. 11. 29; South China Morning Post 신문은 러시아 國營 군수품수출회사인 로스포로제니에 社가 20억달러 상당의 SU-27기 55대의 구매협상을 종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은 프랑스제 미라주전투기와 미국제 F-16전투기를 보유한 대만을 의식하여 수호이 전투기를 복건성 등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중국이 약 300대의 수호이 機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중국이 수호이기의 과학기술과 생산방법을 확보할 경우 장차 이 지역에서의 미공군력을 억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ichard D. Fisher, "China's Purchase of Russian Fighters: A Challenge to the U.S.," *Asian Studies Background*, No. 142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1996. 7, pp. 1~2.

8) 이는 북경을 방문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무장관간의 합의 사항이다. *Korea Herald*, 1996. 11. 20.

9) 중·러 공동성명에는 한·미 양국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4자회담에 중국이 참여하는 데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지지가 없었다.

3. 中·日間の 軍備競争 擴大

1996년말 하시모토 일본총리는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일본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신사참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함으로써 兩國간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노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⁰⁾ 중요한 점은 兩國 상호간의 국방력 강화의혹의 증폭으로 兩國의 軍備競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이 방위적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중국이 1995년 11월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였어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의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兩國간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그간 중국은 미국 및 러시아와 핵균형을 이루고, 일본의 국방력 증대를 제압하기 위해 핵실험을 통한 핵전력 증강에 주력하여 왔다. 중국은 “核擴散금지조약에 의해 개발도상국이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¹¹⁾고 주장하는 한편, 자국의 핵실험이 과학이나 민간 연구목적인 평화적인 핵실험이라고 강변하고 2~3년 前부터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고¹²⁾ 미·리가 제안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

10) 「世界日報」, 1996. 11. 26. 일본은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전에 강행된 두차례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무상지원을 처음으로 동결하였다. 이번 하시모토-강택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동결된 6,300만달러 규모의 대중 무상원조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1) “China’s Policy toward Arms Control and Arms Reduction,” *FBIS-CHI*, November 15, 1995, pp. 14~9.

12) Michael Richardson, “China Seeks to Avoid Ban on Nuclear Tes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2, 1996; Patrick E. Tyler,

(CTBT)에도 1996년 12월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미·일 新安保共同宣言」전후로 러시아로부터 SU-27기 등 첨단 군사무기 도입이 결정되는 등 중국의 군사력 강화 노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軍事力 증강에 주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東北亞 政策에 대한 인식과 안보전략의 변화때문이다. 중국은 냉전종식 직후부터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수용함에 따라 1970년대 이후부터 중·미간에 형성되어 왔던 전략적 聯合關係(strategic alignment)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脫냉전이후 새로운 東北亞 國際秩序의 태동과정에서 미국의 충분치 못한 균형자 역할로 인해 중국의 안보이해가 훼손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介入政策의 실체는 자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판단한 데 있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미·중간 安保協力은 구소련 붕괴 이전과는 달리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兩國간 안보차원의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클린턴 미 대통령의 訪中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도 兩國관계의 소원과 긴장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클린턴 미대통령 再選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1997년도 정상회담을 제안, 중국측과 협의하고 있으나, 대만문제와 人權問題에서의 갈등과 중국이 제의한 미·중 兩國간 核武器 선제 不使用 原則에 대한 미국의 불수용

“Chinese Denounce Big Nuclear Power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7, 1995, p. 1, & 6.

등으로 인해 중·미가 1970년대에 향유하였던 安保協力 수준으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미래의 과학·기술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체제를 첨단화하고 自衛隊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꾸준히 모색하여 왔으며 특히 해·공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1992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은 미7함대보다 3배에 달하는 구축함과 프리깃함 및 4배에 달하는 P-3 Orion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최신예 F-15기를 포함한 304대의 방공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의 北美防空司令部(NOTAD)보다 더 많은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¹³⁾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東北亞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일 兩國중 어느 국가의 군사력이 東北亞 安定을 더 저해하는 수준인가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¹⁴⁾ 중국은 일본 海軍이 公海上에서의 작전능력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서 7,200톤급의 초대형 군함인 이지스(AEGIS) 구축함을 進水하고 있고 SSM-1B 미사일의 對艦 공격력 때문에 자국의 해군력보다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13) 미국방대학원, "Political and Economic Impacts on the North Korean Threat", 「합동군사연구」(국방참모대학, 1992), p. 272.

14) Robert Dujarric, "Toward a Coherent U.S. Policy in Northeast Asia," Hudson Briefing Paper, No. 194, 1996. 6. Dujarric은 일본이 중국에 비해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Garver 교수 역시 21세기에도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ohn W. Garver, *Foreign Re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3), pp. 326~330.

15)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5-9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SIPRI *Yearbook, 199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중국은 일본이 독자적인 플루토늄 재처리 생산과 1994년 H-2 로켓트 발사성공으로 核武裝에 대한 준비는 이미 실현단계에 도달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핵탄두를 장착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DF-4 10기와 DF-3 60기가 일본을 겨냥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등 兩國간의 군사위협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¹⁶⁾

현재 兩國의 軍事力 투사능력을 비교해 보면 가히 서로 비등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전술, 전략핵무기를 제외한 在來式 軍事力 수준만을 비교한다면, 實戰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통신과 각종 군사장비 등의 많은 첨단기술 부문이 결여되어 있는 중국이 일본에 비해 덜 위협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核武裝을 시도할 경우, 일본의 군사적 위협능력은 중국의 능력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4. 美·北 關係改善

미국의 對한반도 安保戰略 基調는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關係改善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對南 軍事挑發 억제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共助體制를 유지하는 데 있다. 1994년 10월 21일 미·북간 제네바 핵협상 타결이후, 미국은 1995년 1월 대 북한 경제제재 1단계 완화조치를 실행하였다.¹⁷⁾ 또한 김일성 사망

일본은 작전범위가 5000마일인 이지스 구축함 8척을 건설할 예정이다.

16) *The Future of Nuclear Weapons: Report of the U.S.-Japan Study Group on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 C.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5), pp. 46~47.

이후 급심한 經濟難으로 북한정세가 불안하여¹⁸⁾ 미국은 북한의 한반도 긴장조성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經濟支援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對北韓 식량지원과(1996년 2월 2백만 달러와 6월 6백만달러)¹⁹⁾ 輕水爐 건설지원, 미군유해 송환협상 등을 통해 미·북 관계는 원만히 개선되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침투 사건을 한국정부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우, 향후 북한과 미국은 핵동결, 輕水爐 건설사업 등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東北亞 安保環境은 중·미간 안보 갈등의 지속과 미·북 關係改善이라는 복합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일 同盟體制 강화로 인한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려는 中·러간의 戰略的 同伴者 관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중·일간 軍備競爭이 확대됨으로써 域內 안보구조는 여전히 不安定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7) 이동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과 의미」, 외교안보연구원, 1996.

18) 북한은 1996년 신년사에서 종래 강조하던 사상, 기술, 문화 3대혁명 기조와는 달리 정치사상, 경제, 군사부문 진지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유지에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위기관리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로동신문」, 1996. 1. 1.

19) Nicholas D. Kristof, "Avoiding 'the Worst'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6. 7. 8.

Ⅲ. 韓·中 安保關係

한·중 안보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국의 대한 반도 安保戰略을 고찰하고, 대북 안보관계와 한·중간의 安保懸案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입장에 대해 선별적인 支持를 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安保利益을 얻으려는 전략에서 기인한다 할 것이다.

1. 中國의 安保概念과 新戰略敎理

중국의 안보개념은 전통적으로 勢力均衡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에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전략으로 채택한 이후 經濟改革과 開放, 그리고 과학·기술발달을 통한 경제력의 증진을 도모하여 왔다. 이에 따라 자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의 우선과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綜合國力’ 배양에 적극 기여하는 데 치중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걸프전에서 첨단무기와 집단안보체제를 이용한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 위세에 큰 충격을 받음으로써 중국의 安保戰略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신전략 교리는 情報戰 등과 같은 高技術과 전쟁시 초기단계에서 미리 적의 공격력을 制壓한다는 ‘積極防禦’를 중시함으로써 방위개념을 한층 포괄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방위 개념에 따르면, 중국의 가상적으로부터 홍콩, 북한 등 주요 주변국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 經濟發展을 희생하더라도 동 지역에 대한 중국

의 안보이해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중국 해군, 공군 및 핵관련 교리도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中國海軍의 근해방어 범위가 200만 평방마일에서 300만 평방마일로 확대되었으며, 海洋統制(sea control) 뿐만 아니라 海洋抑止(sea deterrence)를 위한 항공모함 건조와 夏級의 핵잠수함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군 교리에서도 걸프전 이후 중국은 신속대응전략(Rapid-Response Strategy)에 바탕을 두고 制空權 장악을 위한 공중전과 지상공격 능력 향상을 중시하여 왔다. 그러나 3軍중 광대한 영토와 첨단기술 결여로 인해 공군력이 제일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²⁰⁾ 중국은 또한 자국의 핵전략을 더욱 포괄적인 공격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중국의 핵전략이 ‘最小抑止’에서 ‘制限抑止’로 전환됨에 따라, 敵의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었으며, 동 전략은 核先制不攻擊 선언의 포기, 다탄두 개발, 三峽댐 방어를 위한 미사일 防禦計劃(TMD) 표명 등으로 포괄성을 띠게 되었다.

2. 中國의 對韓半島 安保戰略과 對北 安保關係

가. 中國의 對韓半島 安保戰略

중국의 대한반도 안보전략은 직·간접적으로 東北亞 安保戰略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은 東

20) Kenneth W. Allen, Glenn Krumel, and Jonathan D. Pollack, eds., *China's Air Force Enters the 21st Century* (Santa Monica, California: Rand, 1996), pp. 101~125; Lin Chang Sheng, 「동북아 재래식 군사력 평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발표 논문, 1996. 8. 27.

北亞 安保秩序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기존에 중국이 향유하였던 핵국가로서의 位相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軍事大國化를 억제하는 데 있다.²¹⁾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중국은 무엇보다 북한이 자국안보의 완충지대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²²⁾ 현재 중국은 북한을 중국안보의 완충지대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最適政策이며 이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選別的인 支持 政策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데 있다.²³⁾ 중국은 북한이 유발하는 한반도 불안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하여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다. 經濟難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로 북한주민들이 대거 중국으로 집단탈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²⁴⁾ 중국은 북한이 經濟改革과 개방

21) Huang Renwei, "Tentative Study of US Strategic Choice in the Asian-Pacific Region," *Shijiejingji yanju*(World Economy Study), No. 1, 1994, pp. 3~7.

22) 탈냉전이후 중국은 한반도를 자국과 미국간의 영향권의 완충지대로 여겨 왔다. Hsin Pao(Hong Kong), April 8, 1994, p. 24, in *FBIS-China*, April 12, 1994, p. 13~15 참조; Samuel S. Kim, "The Emerging Northeast Asian Order and the Chinese and Russian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11th U.S. Forum, Arlington, Virginia, August, 1995, 18~20; 「신아세아」, 겨울호, 1995, p. 29.

23) 金景一, 「한반도통일에 대한 분석 및 중국정책에 대한 사고」, 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1996. 11. 28, p. 11.

24) 독일 연방정보부는 북한에 대재난이 발생할 경우, 북한주민 650만명이 중국으로 집단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주민들이 휴전선을

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²⁵⁾ 한편 중국은 한국이 自國의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자로 판단하고 한국과의 經濟協力 확대를 추진하여 왔다.

나. 中國의 對北 安保關係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미국의 대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은 1996년 초 북한에 대해 군사 및 經濟支援을 확대함으로써 안보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동년 3월 지호전 중국 국방장관이 북한인민군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중·북 안보의 공고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兩國간 고위급 軍人事 交流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군사무기 수출규모는 1996년 10월 현재 전년대비 247% 증가되어 346만달러에 달하였다.²⁶⁾ 1996년 5월 홍성남 북한 부총리의 5일간 방중시에도 이봉 중국 총리는 韓半島 平和와 안정 및 중·북 우호협력관계의 공고화와 발전이 중국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홍성남은 세대를 이어 北·中 友誼를 발전시키는 것이 김일성의 유지임을 강조하여 兩國간 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부총리급인 羅幹 중국국무원 비서실장이 35주년 「中·北 友好協力相互援助 條約」 체결 기념행사 일환으로 동년 7월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丹東, 도재 등 국경도시를 통해 탈출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점을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 「世界日報」, 1996. 11. 23.

25)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陸忠偉는 3~5년내에 북한이 중국식 개방모형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陸忠偉 부소장과의 면담 내용, 1996. 8.

26) *Korea Herald*, 1996. 12. 12.

방북하였으며, 이붕 총리는 訪中중인 金潤革 북한 부총리에게 중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김정일 영도하의 북한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7월 11일 35주년을 맞는 중·조 원조조약은 兩國간 전통적인 友誼의 상징”이라며 “쌍방은 향후 우호협력관계를 진일보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兩國관계의 공고성을 나타낸 바 있다.²⁷⁾ 이와 함께 중국 北海艦隊 소속 두척의 함정이 중·북 우호조약 기념행사로 남포항을 처음으로 친선 방문하는 등 중국의 對北 安保紐帶를 과시하기도 하였다.²⁸⁾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중시하여 북한에 다방면에 걸친 經濟支援을 하고 있다. 중국은 1996년 5월 23일 「中·朝 경제기술협력협정」과 대북 2만톤 「식량원조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96년부터 5년간 북한에 대해 원유 120만톤, 코크스 100만톤을 無償支援하기로 약속하였다.²⁹⁾

중국이 얼마나 북한 經濟難을 심각히 판단하고 있는가를 한·중 간 무역의 중국측 흑자분과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액수를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은 한·중 수교이후 특히 1993년부터 한국과의 무역에서 계속 黑字를 유지하여, 1993년에는 1,200만달러, 1994년에는 740만달러, 그리고 1995년에는 1,7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³⁰⁾ 1996년 중국은 북한에 2000년까지 年間 50만톤의 쌀을 포함한 식량지원을(50만톤 중 半은 무상으로, 나머지 반은 우호

27) 「世界日報」, 1996. 7. 10.

28) 「朝鮮日報」, 1996. 7. 22.

29) 「조선중앙통신」, 1996. 7. 12.

30) 통계청, 「중국의 주요경제사회지표」, 1996. 8.

가격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의 食糧 不足分이 수입 및 외국원조를 제외하더라도 약 100만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쌀가격을 톤당 350달러로 추정하고 만약 중국의 대북 쌀 지원량을 20만톤으로 산정할 경우, 이는 7천만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가히 1994~1995년도에 한국과 貿易에서 벌어들인 흑자 총액인 2,440만달러의 3배에 가까운 규모로 북한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 북한 經濟難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우려를 알 수 있다.³¹⁾

요약하면, 북한의 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중국은 대북 군사교류 및 經濟支援을 통해 兩國관계가 소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3. 韓·中關係 現況과 安保懸案

가. 兩國關係 現況

1950년 한국戰 발발이후 중국이 무력 介入함으로써 한·중간에 적대관계가 형성되고 1970년대 초까지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따라 兩國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31)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陶炳尉 선생은, 1995년 북한의 극심한 水害이전에는 식량부족분이 평양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약 100~150만톤으로 추정되었으나, 水害로 인해 약 50~100만톤 규모의 식량이 더 부족하여 96년 현재 부족한 전체량은 약 150~25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식량 전체 부족분 중 약 20%에 달하는 50만톤 정도는 중·북간 무역이나 북한주민들의 중국으로부터의 반입 등으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50만톤 지원, 한국의 15만톤 지원, 국제기구에서의 20~30만톤 지원 그리고 태국으로부터의 40~50만톤 수입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은 미국이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은 정도로 극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이 중국과의 關係改善을 모색함에 따라 한국의 對中 敵對關係도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중간 전략적 연합관계가 실현됨으로써 한·중 관계는 敵도 友邦도 아닌 상태에 있었다.

1992년 8월 한·중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兩國관계는 정상화 되고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韓·中 修交이후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1996년 江澤民 중국 國家主席의 방한이 실현됨으로써 한·중 외교관계는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兩國간 경제관계는 해를 거듭할 수록 交易 및 投資 면에서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중간 교역액이 1991년 42억달러, 1992년 86억달러, 1993년에는 100억달러, 1994년에는 130억달러로 증가되었다. 1995년 한·중 교역액은 170억달러 규모로 이는 중국 총 대외교역의 4.9%에 해당하며 한국은 중국의 5대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투자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2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이다.³²⁾

그러나 이에 걸맞지 않게 한·중 兩國간 안보관계가 미미한 것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데 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1982년 판문점 군사정전위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의 실시를 통보하고 연습 參觀을 초청한 바 있으나, 중국은 참관을 거절하였다. 兩國간 실질적인 군사교류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가 한·중 수교이후에야 초보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32) 김시중,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한국동아시아연구회-중국평화군축협의회 발표논문, 1996. 10, pp. 3~5.

1994년 4월 한·중 兩國은 상호 武官府 설치에 합의하여 1996년 12월 중국 군사대표단의 첫 방한으로 兩國간의 실질적인 군사교류 및 군사대화가 실현되었다. 중국국방부 外事局長(소장)을 단장으로 한 인민해방군 간부 4명은 방한기간중 한국 국방관련 고위층과 兩國간 軍事交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까지도 한·중 안보관계를 중·북 안보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 단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북한 駐在 중국대사에는 차관급, 주한 중국대사에는 국장급으로 파견하고 있고, 또한 북한주재 中國 武官은 장성급 인사를 파견하면서도 한국주재 중국 무관은 대령급으로 지정하는 등 南北韓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수교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중국해군이 한국항에 입항하는 일은 당분간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兩國間 安保懸案

한·중 兩國간 안보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懸案은 停戰協定 문제, 4자회담 문제, 북한 核透明성과 미사일 개발문제 등이다.

(1) 停戰協定 問題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종식이후 駐韓美軍의 존재가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며 이로 인해 對南 赤化統一이 실현되

33) 「世界日報」, 1996. 12. 4.

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력화함으로써 미국과의 平和協定 체결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駐韓美軍 철수를 목표로 삼아왔다.

1974년부터 판문점 군사정전위 활동을 無力化하려는 북한의 企圖는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단독으로 停戰協定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전쟁의 실질적인 교전 당사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제의를 거절하여 왔다.³⁴⁾

김일성 死後에 진전되고 있는 미국과의 긴장관계 완화에 힘입어 북한은 또 다시 1994년부터 停戰協定 폐기 필요성을 거론하고 정전협정 무력화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이고 있다. 북한은 동년 4월 28일 군사정전위 북한측 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 그 다음 날인 4월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북측지역에 개인화기로 무장한 40명의 군인을 배치시켰으며, 12월 15일에는 중국측 대표단까지 철수시킨 바 있다. 1995년에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정찰활동까지 감행하는 등³⁵⁾ 북한의 停戰委 무력화 기도는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1996년 들어서는 북한의 전쟁대비 군사태세와 한국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金光鎭 次帥는 3월 29일 북한 인민군대의 사명이 “침략행위를 방어하는데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장담하고, “한반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전쟁의 발발여부가 문제가 아

34)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6.

35)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4. 5; 「韓國日報」, 1995. 5. 11.

나라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는³⁶⁾ 등 대남 好戰 태세마저 보이고 있다. 남북한간의 전쟁상태 종결을 위한 미국과의 단독협상안을 제의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북한은 1996년 2월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단계로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北·美共同軍事機構」를 설치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하는 등³⁷⁾ 미·북간 군사협상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과는 상이한 견해를 표명하여 왔다. 중국은 북한의 對美접근을 지지하면서도 자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한의 대미 平和協定 체결에는 반대하고 한국의 기존 입장인 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³⁸⁾

1996년 4월 북한군의 停戰協定體制 위반행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의 성명발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한 단계 낮은 의장의 對언론 발표문으로 대체된 바 있다.³⁹⁾ 그러나 최근 잠수함까지 동원한 북한의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36)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휴전선 인근 전방기지에 170mm 자주포를 300여문에서 500여문으로, 240mm 방사포를 140여문에서 280여문으로 각각 증강 배치하여 기습공격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世界日報」, 1996. 12. 6.

37) 북한외교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1996. 2. 22.

38) 중국은 정전협정이 1953년 북한 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을 한 당사자로 하고 유엔군을 또다른 당사자로 하여 공식적으로 조인되었으며,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전협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도 정전협정에 관련된 모든 나라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이 합의한 선택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Zhou Xingbao,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China," 통일원 정세분석실, 1996. 5, p. 6.

39) *Korea Herald*, 1996. 10. 16.

에 대해서 중국은 과거보다 한단계 강력한 안보리의장 성명 발표에 동의하였는 바, 중국이 북한의 停戰協定 위반문제로 인해 안보리의장의 대북 경고성명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⁴⁰⁾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중국이 한반도사태의 심각성을 인정, 한국입장에 동조하였기 때문이었다.

의장 성명의 前文은 “안전보장이사회는 18일의 북한 잠수함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전협정이 완전히 준수될 것과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평화와 安定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停戰協定이 새로운 평和體制로 전환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권장한다”라고 밝히고 있다.⁴¹⁾

의장성명의 前文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입장인 南北韓 停戰協定 유지, 남북 당사자간 협상 우선 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前文에 나타난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중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비록 북한의 요구에 따라 1994년 9월 自國의 군사 정전위원회 대표단을 철수하였음에도 韓半島 평和體制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이 배제한 상태에서의 미·북간 정전협정의 平和協定으로의 대체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40) *Korea Herald*, 1996. 10. 18.

41) UN Security Council Document, S/PRST/1996/42, Press Release, SC/6279, 1996. 10. 15.

둘째, 중국이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當事者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에 공감한 것은 남북한문제의 해결은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입장때문이었다. 만약 북한의 무력 돌발 사건에 대해 한·미 兩國이 대북 무력 제재를 시도할 경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훼손되어 自國의 국가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1993년 5월 북한 핵문제에 안보리가 미국의 對北制裁 경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대해 중국이 기권하고 의장성명 발표까지도 단호히 반대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향후 북한의 對南 武力挑發 행위에 대해서 만약 한국이 단독으로 對北 武力制裁를 시도할 경우, 중국이 이를 억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북한에 암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2) 4者會談

1996년 4월 16일 한·미 兩國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미국,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4者會談을 제의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절 52주년 경축사에서 4者會談의 주요 의제로는 한반도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가 토론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긴장완화조치 차원에서의 남북경제협력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대북한 안보, 군사,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4자간의 토의가 가능함을 시사한 바 있다.⁴²⁾

한국의 제안인 4者會談에 대해 중국은 현재 소극적인 지지만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해 韓半島 平和保障 문제는 북·미 사이에서 토의·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논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⁴³⁾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중국이 4者會談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 표명할 경우, 북한의 4자회담 收容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고 또한 남·북간의 이견으로 4者會談이 성사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북한이 대미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대비해, 한국은 중국의 참여를 수용함으로써 중국의 對北 影響力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⁴⁴⁾

한·미 兩國의 제안인 4者會談에 대해 중국이 현재까지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對美關係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한, 4者會談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중국이 판단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南北韓 關係가 긴장된 현 상태에서 중국이 4者會談 실현

42) 4자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사항은 무력불사용,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불간섭 원칙에의 합의와 기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협의 등이다. 전성훈, “한반도의 핵문제와 군비통제: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변화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탈냉전기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 1996. 9. 13. pp. 28~29 참조.

43)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276호 (96. 4. 13 - 4. 19), pp. 3~5.

44) Selig S. Harris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Four-Power Talks,” a paper presented to a conference sponsor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the Institute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Che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ROK, November 29, 1996, p. 17.

을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1996년 4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중·미 외무장관회담에서도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4者會談 성사를 위해서는 남북한 회담이 선행되어야함을 표명한 것⁴⁵⁾ 역시 아직까지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있다. 이는 4者會談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이 미·북간, 일·북간 關係改善을 우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펴서 남북한간의 긴장해소에 앞장 설 필요가 있음을 중국이 요구하는 측면이 된다.⁴⁶⁾

셋째, 중·미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 4者會談 참여를 적극 권유할 경우, 북한이 이에 반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점도 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4者會談 참여의 중요한 조건은 남북한 대화 선행 조건보다는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여부나 美·北關係 개선의 급진전이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4者會談을 수용할 경우, 중국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할 것이며, 또한 미·북 關係改善이 급진전될 경우, 중국은 미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의식하여 북한에 대해 4자회담의 수용을 적극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4者會談의 參與形式 여하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만약 남북한이 먼저 회담한 후, 미국과 중국

45) 「朝鮮日報」, 1996. 4. 21.

46) Lee Samsung,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 Three-step concept of Peace Progres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organized by Kyungnam University-American University, Seoul, Korea. 1996. 5. 22~23, p. 23.

의 참여가 보장되는 會談形式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참여할 것이나, 중국과 한국이 미·북회담 선행 이후에 참여하게 될 경우, 중국은 4者會談의 참여를 유보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 일본이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의 6자회담 경우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1950년 韓國戰의 교전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여 참여를 거부할 것이나, 4者會談 성사이후 러시아와 일본이 나중에 참여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6자회담 형식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이 종전과는 달리 東北亞 다자간 安保協力에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統一方式이 중국의 통일방식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 北韓 核透明성과 미사일 開發問題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北韓軍의 대남 군사 위협태세(<표 1> 참조), 북한의 핵개발 의혹상존과 북한의 공격형 미사일 개발 위협성 등에 기인한다.

북한의 核透明성이 완전하게 확보되려면 북한은 제네바 합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핵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제네바 합의가 對北 輕水爐 제공조건으로 북핵 동결을 약속받았지만 국제법상 구속력이 약한 제네바 합의만으로 북한핵의 透明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이다.⁴⁷⁾ 제네바 합의

47) "North Korea's Nukes," *The Washington Times*, editorial, 1996. 11. 8;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핵합의는 경수로와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갖는 것이 국익에 상충하지 않기

에 의하면, 북한이 최초로 제출한 핵관련 보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輕水爐 핵심부품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2003년경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어 북한 영변의 2개 시설에 대한 特別査察은 2003년까지 유보된다. IAEA는 2003년의 특별사찰이 실현되기 전까지의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규명을 위해 두가지 조사, 즉 영변 방사성 화학실험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용 500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 플루토늄양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사실 그동안 제네바 합의에 따른 사용후 연료봉 밀봉작업에는 협조하면서도 IAEA가 요구하는 폐쇄된 영변 원자로 2기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⁸⁾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미·북간 협상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과거 핵 透明性 확보를 위한 IAEA나 유엔 차원에서의 무력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IAEA의 대북 조치안으로 인해 향후 유엔의 대북 武力行事が 명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96년 10월 29일 IAEA와 북한이 체결한 核安全協定の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기권한 바 있다.⁴⁹⁾

북한의 과거 핵 의혹 외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핵탄두 장착 실현 가능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미·

때문에 제네바 핵합의는 정치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U.S.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Letter Report(1996.10).

48) *Korea Herald*, 1996. 11. 9.

49) 「국민일보」, 1996. 10. 30.

북간 제네바 합의이후에도 연간 100기의 스커드 미사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1995년부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정거리 2000km 大浦洞 1호(일명 노동2)는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이어서 사정거리 2000~3500km인 대포동 2호는 2000년경에 실용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⁰⁾

「核擴散防止條約」과는 달리 미사일 개발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공격형 미사일 개발억제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는 첫째, 미국이 사정거리 300km이상 탄두적재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國際條約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조치만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미사일 기술이전 統制體制(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북한 미사일의 제3국으로의 수출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미·북간 미사일 협상은 장시간을 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⁵¹⁾ 셋째,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開發問題를 동아시아 안보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우려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이를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어 북한에 대해 미사

50) “북한군의 미사일 개발 실태,” 「북한」, 1996년 11월호, pp. 191~195. 북한은 이란, 리비아 등에 1980~1993년 동안 총수출액 204억중 30%인 80억 달러 규모로 무기를 수출한 바 있다. 「世界日報」, 1996. 9. 26; 美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1996년 봄에 사정거리 500km인 스커드 C 미사일 관련 부품을 이집트 등에 수출하고 있음을 밝혔다. *Washington Times*, 1996. 6. 21.

51) 1996년 4월 베르린에서 개최된 미·북간 미사일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제조와 중동지역으로의 수출문제를 거론하였으나 미국과 북한의 기본입장만이 되풀이되어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1996년 11월 니콜라스 번즈 미국 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U.S. Dept. of State, *Daily Press Briefing*, 1996. 11. 8.

일 輸出抑制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⁵²⁾

<표 1> 남북한 군사력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지상군	56만명	69 ¹⁾ 만명	92만명	105.5 ²⁾ 만명
		해 군	6.6만명		4.7만명	
		공 군	6.4만명		8.8만명	
지상군	부대	군 단	11개		20개	
		사 단	50개 ³⁾		54개	
		여 단	21개		99개	
	장비	전 차	2,050대		3,800여대	
		장갑차	2,250대		2,800여대	
		야 포	4,700여문		11,000여문	
해군	수상전투함	180여척		430여척		
	지 원 함	50여척		335척		
	잠 수 함	4척		35척 ⁴⁾		
공군	전 술 기	530여대		840여대		
	지 원 기	160여대		510여대		
	헬 기	630여대		290여대		
예비전력(병력)		308만여명 ⁵⁾			660만여명 ⁶⁾	

- 1)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른 방위병 현역화로 병력 3만5천 증가, 해군에 해병병력 포함
- 2) 지상군 해병병력 포함
- 3) 해병사단 포함
- 4) 북한 잠수함 35척 중 소형잠수함 9척 포함
- 5) 한국:예비역/보충역
- 6) 북한:교도대/노동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인민경비대
(출처: 「世界日報」, 1996. 10. 5)

52) 「世界日報」, 1996. 6. 8.

IV. 東北亞 安保秩序 展望

향후 東北亞 安保秩序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는 중·미 갈등 지속, 중·일의 경제발전에 따른 軍備競爭, 미·북 關係改善 진전과 한·미 갈등 등이 지적될 수 있으며, 냉전시대와는 달리 經濟要因들이 안보요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 中·美 葛藤 持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이후 미국과 중국은 兩國간의 지속적인 緊張狀態는 국익에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1997년에 양국 정상 의 교환방문을 실현한다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관계의 긴장이 점차적으로 緩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미관계가 향후 전략적인 제휴관계로 발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또한 友邦으로서의 발전에도 한계를 지닐 것이다. 이는 중·미간의 갈등이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전략상의 異見, 대만문제, 人權問題 등으로 인해 지속될 수 있으며,⁵³⁾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로 인한 갈등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6년 초 대만해협 상에서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陸海空軍 기동훈련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 무력시위로 인해 美태평양함대와의 일촉즉발의 對峙 局面이 발생하였다. 이는 1970년대 이후 兩國관계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같은 미국의 대중 무력대치 행위는 미국의

53) "No Ordinary General: U.S. Seeks Cordial Ties With Chinese Militar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6. 12. 12, p. 26.

장기적인 對中 包圍戰略에 바탕을 둔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도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⁵⁴⁾ 兩國간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나 안보전략상의 이견, 대만문제 등으로 인해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 關係改善의 속도와 폭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한 중·미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 關係改善 노력 역시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할 정도로 민감해 있는 중국으로서는 진전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影響力이 상실될 것을 우려할 것이다. 1994년 미·북간 체네바 핵협상 타결이후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의 단독 軍事協商에 중국이 반대한 것은 이러한 중국의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후 統一韓國이 자국의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을 구비하려 할 때, 중국은 한국의 노력을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억제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반대치 않을 것이다. 55) 그러나 문제는 중국을 의식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美軍 撤收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⁵⁶⁾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54) 「人民日報」, 1994. 8. 5.

55) William Clark, Jr.은 한반도 분단상황이 지속되기를 가장 바라는 국가는 일본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크라크는 통일한국이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감으로써 한국의 안보전략이 일본을 겨냥할 가능성을 일본이 우려하여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잔류를 지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William Clark, Jr., “동북아정세 변화와 미·한 안보협력방안,” 민족통일연구원 개원5주년 국제학술회의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p. 11, p. 13 참조.

주도하에 실현될 경우, 중·미간의 緊張과 葛藤이 조성될 것이다. 즉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調停者 役割 수행을 중국이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東北亞 및 한반도 安定維持에 한 관건이 될 것이다.

2. 中·日의 經濟發展과 軍備競爭 深化

1980년대 후반부터 연 10% 이상의 놀라운 중국의 經濟成長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의 급격한 사태 변화가 없는 한, 적어도 약 8%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에 맞추어 중국은 1991년에서 1995년사이 國防費를 매년 12% 이상씩 증가시켰으며, 특히 1994년에는 21.5%를 증가시켰다.⁵⁷⁾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비 지출 증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본을 자극하게 되어 일본의 軍事力 增大가 예상되며, 중·일간의 軍備競爭을 우려한 남북한은 군비증강을 더욱 모색하게 될 것이다.⁵⁸⁾

중국은 海軍力 增強, 특히 항공모함 보유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
- 56) 미국은 한반도 통일후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령부를 폐지할 것이나 주한미군의 장래가 동북아지역 주둔미군 재편여부와 그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미군병력의 한반도잔류는 매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와 주한 미8군 사령관 내정자인 존 티렐리대장의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증언, 「世界日報」, 1996. 6. 13.
- 57) 이 기간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2.5%라는 고도의 수준을 지속하여 왔다. 중국이 경제성장률과 같은 정도의 국방비 증가율을 모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중국은 경제와 안보의 역할을 같은 수준에 두고 있는 것이다.
- 58) Susan M. Pederson and Michael J. Cusak, "The Implications of Proliferation in China, Korea, and the Subcontinent," in Ralph A. Cossa, ed.,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Washington, D. 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3), pp. 155~82.

예상된다. 1997년 5월 중국·프랑스 北京會談에서는 건조된 지 35년된 프랑스제 클레망소(Clemenceau)함 구입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항모는 장거리 전투기의 적재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하다. 2005년경에는 중국은 40대의 전투기를 적재할 수 있는 두 척의 48,000톤급 전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⁵⁹⁾ 그러나 항모가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海·空軍, 미사일, 대잠수함 방위능력 등이 충분히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우선 대잠수함 방위능력 향상에 주력할 것이다.

일본의 經濟力도 신장될 것인 바, 이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예상된다. 이미 일본의 軍事費는 1995년 현재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1세기에는 군사적 超強大國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학자도 있다.⁶⁰⁾ 일본은 1996년부터 향후 5년간 기초과학과 기술부문에 약 1,55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投資規模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⁶¹⁾

주목할 점은 일본이 경제력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미·일 新安保體制에서 자국의 자주적인 행동과 역할을 요구할 경우,⁶²⁾ 兩國간

59) Nayan Chanda, "No-Cash Carri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6, 10. 10, p. 20.

60) George Friedman and Meredith Lebard, *The Coming War with Japa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61) Andrew Pollack, "Japan adds Billions For Basic Research,"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6. 6. 25.

62) 일본은 미·일 신안보체제하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자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에 걸맞는 위상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과거 걸프전 당시 자국의 역할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았다는 불쾌한 경험을 되살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1989년 천안문 사태시 미국의 대중 경험중단 조치에 동조한 국가도 일본이지만 미국보다 먼저 대중 경험을 재개한 국가도

同盟關係의 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점이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의 대미 輸入規模가 이미 두배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일본의 대미 수입액은 이미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미 수입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또한 1990년 후반기부터 일본의 駐日美軍 費用 負擔金은 미국의 자체 부담금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일본 국방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⁶³⁾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과의 經濟協力과 안보분담금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東北亞 安保戰略을 수립하여 실행할 경우, 일본의 독자권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중국은 남사군도 등의 海上路 보호를 위해 원양 방어전략을 채택하고 투사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중동 석유 및 원자재 수송시 반드시 경유해야 할 남중국해의 해상로를 중국이 위협 또는 봉쇄할 경우, 일본은 이 지역 보호를 위한 海軍力 配置를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보여, 중·일간의 해상로 장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더욱 확대될 경우,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요구와 이에 따른 동아시아에서의 독자적인 역할확대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중·일간의 軍備競爭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다만 중·미관계가 개선되는 경우, 미국은 일본의 요구를 억제할 수 있게 되고 중국 역시 일본과의 대결로 인한 일본의 대중 투자 동결 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중·일간의 軍備競爭 속도는 완화될 수

일본이었다. 이와 같이 경험중단을 지렛대로 한 미국의 대중 압력조치에 대해 일본이 반대할 가능성은 클 것이다.

63) James A. Winnefeld, et al., *A New Strategy and Fewer Forces: The Pacific Dimension*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1992), p. 16.

있을 것이다.

3. 美·北 關係改善과 韓·美 同盟關係 變化

미국은 향후 東北亞 국제질서 구축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안보상의 均衡者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위협과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의 同盟關係의 결속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의 關係改善을 최우선시하여 한국과의 關係改善을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클린턴 2期 미행정부 역시 북한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조건을 자국의 대북 관계 개선정책에 확고히 연계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對北政策을 수행하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⁶⁴⁾ 한·미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다.

향후 북한의 핵합의 이행 상황, 미사일회담과 유해송환 회담 진전도 및 4者會談 수용 여부에 따라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제재 완화조치와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등으로 미·북간 關係改善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미·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 이에 따른 한·미 同盟關係의 약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로 인한 미·일 同盟關係의 변화가 예상되는 것과 같이, 중국과의 갈등을 의식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대북 影響力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

64) 김국신, 「미국대통령 및 의회선거 결과분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6-09, 1996. 11, p. 14.

려할 경우 한국과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향후 東北亞 國際秩序 안정유지에는 미국의 對中 전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東北亞 安保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중·미 갈등 지속, 중국과 일본의 軍備競爭, 미·북 關係改善 진전 등이 지적되었으나, 이 변수들 역시 미국의 대중 전략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으로부터 포위인식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일간 軍備競爭이 확대되고 또한 미·북 關係改善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중·미 갈등으로 인해 域內 안보정세는 불안정할 것이다. 다만 미·중 관계가 보다 정상화되면 될수록, 미·일 신안보체제의 대중국 견제가 완화되어 역내정세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며 한반도정세는 미·북간의 협상과 대화로 인해 안정된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미 葛藤構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은 고려하면서 다음 章에서는 향후 한·중 兩國의 安保協力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V. 韓·中 安保協力 方案

1. 基本方向

韓·中 修交는 兩國이 냉전시대의 이념적 대치 상태속에서 형성된 불필요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중간의 安保協力은 脫냉전기에 형성되고 있는 불안정한 東北亞 및 韓半島 정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미·북 관계 정상화, 한반도 통일가능성과 東北亞 新國際秩序 형성 등에 대비한 兩國간의 안보협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대중 安保協力の 기본방향을 북한사태 대비, 대미 安保協力の 보완, 中·美간 균형자 역할, 한·중 平和友好條約체결과 東北亞 平和體制 기반구축 등으로 설정하여 대중 안보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가. 北韓事態 對備

우선적으로 북한의 突發事態에 따른 한반도 안정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한·중 兩國간 安保協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중양정보부의 분석에 의하면, 2~3년내 북한의 장래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北韓情勢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도이치 美중양정보부부장은 1996년 12월 美上院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남침하든지, 내부폭발로 붕괴하든지, 아니면 남한과의 통일을 모

색하든지 3가지 중 하나일 것이며 향후 2~3년내 북한의 向方이 결정될 것으로 증언한 바 있다.⁶⁵⁾ 북한사태를 북한의 도발적인 對南攻擊 개시로 인한 남북한 戰爭狀態 돌입과 북한의 붕괴로 인한 한반도 통일 실현으로 구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미 停戰協定을 폐기하고 비무장지대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있어 북한의 대한국 무력도발 시도는 남북한간의 전쟁상태로의 돌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武力挑發을 시도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유엔에서 한반도상황을 토의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명확한 立場調律과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의 무력도발 감행으로 인해 韓半島의 안정이 위태로울 경우, 한국은 중국의 중립적인 입장, 즉 軍事介入 자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對美 安保協力の 補完

이미 분석된 바와 같이 美·中간 戰略的 非對稱性(strategic asymmetry)이 장기간 존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대중 安保協力は 대미 安保協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탈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체제를 비교하면, 미국은 패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유일 超強大國인 반면, 중국은 21세기 초에도 미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⁶⁶⁾ 해외에 전진기지과 駐屯軍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중

65) 「世界日報」, 1996. 12. 14; *Korea Herald*, 1996. 12. 13.

국대륙 이외는 前進基地나 주둔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비해 군사력 투사능력이 월등할 것이다.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 동맹을 활용하여 중국과 북한이 시도하려는 軍事威脅이나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군사적 대응과 억지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⁶⁷⁾ 그러나 중국이 북한과의 軍事同盟이나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활용하여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미·일신방위체제와 한·미 방위체제는 한반도 안정을 유지함에 있어 중·북한 軍事同盟體制나 중·러 전략적 동반자체제에 비해 抑止能力(deterrence capability)이나 군사력 투사능력에 있어 우세한 입장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 安保協力の 기본방향은 미국과의 聯合防衛體制를 보완하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中·美間 均衡者 役割

한국은 동아시아문제에 대해서 중·미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균형자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脫냉전이후

66) 로버트 길핀 교수는 패권국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패권국가는 자국의 힘으로 상대방 국가들이 협력하도록 할 수 있는 국가다. 패권국가는 주요 자원에 대한 장악으로 상대 국가가 협력할 때는 보상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패권국가는 국제질서가 부여하고 있는 규칙에 대한 장악력으로 다른 국가들의 순응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9~10; 중국은 아·태지역의 강대국 세력구도를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일·중으로 구성된 3각구도로 보고 있다. Xue Mouhong, "The New World Order: Four Powers and One Superpower?", *Beijing Review*, Vol. 38, No. 39(Sept 25-Oct. 1, 1995), pp. 19~20 참조.

67) Benjamin Schwartz, "Why America Thinks It Has to Run the World," *The Atlantic Monthly*, Vol. 277, No. 6 (June, 1996), pp. 92~96.

중국의 대미 安保戰略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0년대 미국과의 戰略的 聯合(strategic alignment)으로 미국에 편승하는(bandwagoning)국가였으나, 탈냉전이후에는 미국의 이니시아티브에 제동을 걸고 나름대로 미국의 행동을 조율하거나 억지함으로써 均衡을 취하려는(regulating or balancing)국가로 변모하고 있다.⁶⁸⁾ 중·미관계가 東北亞 安保秩序 형성은 물론 한반도 安定維持에 핵심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東北亞에서의 안보이익을 이해할 수 있는 균형적인 입장을 점차적으로 취하고 중·미 갈등을 축소시킬 수 있는 橋梁的 役割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거부권을 보유하는 유엔안보리 常任理事局 진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상임이사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늘이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언급하였으나 일본의 거부권 없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입장은 중·미간의 균형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⁶⁹⁾

향후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軍事的 影響力 감소를 예상하여서도 한국은 중·미간의 균형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域內 미군의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일본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일본의 對韓半島 影響力 역시 증가될 소지가 많기 때

68) Kenneth N.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1993), p. 67.

69) *Korea Herald*, editorial, 1995. 10. 24.

문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일본과의 安保協力 증진에만 매달릴 경우 중국과의 安保協力 기회는 상실되고 한·중 兩國관계는 소원과 긴장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 韓·中 平和友好條約 締結

한·중 수교이후 兩國간의 安保協力 관계가 兩國이 기대한 만큼 진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중간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다. 兩國간 安保協力이 저조한 것은 중·미 갈등, 중국이 북한을 의식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한 점,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높은 기대감 등에서 연유된다.

또다른 이유를 지적한다면 韓·美關係는 상호갈등이 야기되더라도 기본적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시적인 갈등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한·중관계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호간에 공동의 安保目的과 利益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한반도 안정과 직결시켜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挑發行爲가 한반도 안정을 가장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왔다.⁷⁰⁾ 따라서 한반도 안정에 대한 이와 같은 한·중간

70) 오공단 박사에 의하면, 한국 안보의 제일 목표는 외세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력을 보유하는 데 있으며, 둘째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데 있으며, 셋째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인 반면, 북한의 제일 안보 목표는 외세와 남한에서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있으며, 둘째는 김정일 정권 유지, 셋째는 경제난 해소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오공단 박사는 김정일 정권하에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은 benign-neglect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Kongdan Oh, "Security Strategies of South and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간의 안보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한·중 평화우호조약을 兩國간 군사대화와 협상을 통해 체결하고 同 조약에 相互不可侵 조항⁷¹⁾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상호불가침 조항의 삽입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북한의 오판을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중간의 상호불가침 조항을 중국의 동의가 없는 대남 武力挑發 行爲를 중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한·중 평화우호조약은 남북한간의 군사적 相互信賴가 없는 상황과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최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중·북 同盟條約에 근거한 중국의 한반도 전쟁 自動介入을 억제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마. 東北亞 平和體制 基盤 構築

舊소련 붕괴이후 냉전시대 잠재하였던 領土問題, 人權問題 등으로 인해 지역 불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가들은 共同安保(common security) 또는 協力安保(cooperative security)라는 차원에서 국제질서의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종전의 集團安保 개념이 共同的 적을 목표로 군사적 대치상태를 구체화하였던 반면에, 공동안보 또는 協力安保는 공동 적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의 안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a paper presented for the 11th Annual Conference on Korea-U.S. Security Studies, Seoul, Korea, 1996, 10, p. 3, p. 5, p. 18.

71) 전동진, 「국제적 평화보장 사례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1). 서독이 구소련과 상호불가침조약(1970. 8)을 맺어 사실상 구소련의 대서독 위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시켰다. 「남북연합을 위한 기본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pp. 122~123에서 재인용.

보이해를 존중, 협력하면서 안정과 經濟繁榮을 유지 달성하려는 것이다. 즉 협력안보는 구성국들간의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豫防外交(preventive diplomacy)의 성격이 강하며 지역 안정의 확립을 위해 다자간 대화가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⁷²⁾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東北亞 安保環境이 強大國들간의 긴장관계로 인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여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력안보 차원에서 東北亞 平和體制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東北亞 국가들간의 다자간 안보협의를 통한 한반도안정 유도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다자간 안보협약체 구성은 관련 국가들, 특히 미·중, 중·일간의 不信, 우려,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共同 敵의 위협억제를 목표로 하는 兩國간 군사동맹과는 달리, 공동 적의 不在로 억제 단결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 점을 감안,⁷³⁾ 한국은 우선적으로 중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부문에 주력하여 정부 차원의 東北亞 安保協議體 형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72) Mark M. Lowenthal, "Preventive Diplomacy: Prospect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1993), p. 2.

73) Xu Yi-chong, "Multilateralism in Security," in *National Security and Globalization* (Sejong Institute, July, 1996), pp. 18~22.; James A. Caporas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 John Geral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51-90; Glenn H. Synder, "Alliances,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 (Winter, 1991), p. 130.

2. 部門別 推進方案

한·중간의 구체적인 安保協力은 對北關係 부문(북한의 무력도발 억지차원, 북한의 남침시, 북한붕괴시로 구분), 兩者간 安保協力 부문, 다자간 安保協力 부문 등으로 구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중 兩國은 세부 방안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協議와 對話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가. 對北 關係 部門

(1) 中·北 同盟條約의 自動軍事介入 條項 削除 要請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체결한 사실상의 同盟條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대남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 防衛戰略이 북한의 전쟁도발 억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중국측에 주지시키고 1961년에 맺은 중·북 동맹조약중 自動軍事介入 條項을 중국이 철폐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경우 중국과 북한은 쌍방에 대한 軍事援助를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제공한다는 이른바 「自動軍事介入 條項」이다. 중국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철폐를 위해 한국은 북한이 대남전쟁을 개시하지 않는 한 對北 先制攻擊을 포기한다는 단서를 향후 체결할 韓·中 平和友好條約에 첨가할 필요가 있다.

(2)北韓의 南侵시 中國의 中立 確保

북한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對南 戰爭計劃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하면 전쟁개시 24시간내에 서울점령, 7일안에 부산 함락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經濟難과 체제 불안정 때문에 한국과의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북한이 전쟁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정권유지 차원에서 中國과의 사전 협의없이 局地戰 내지는 制限的 全面戰을 단독으로 감행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최근 북한은 軍事力의 2/3 정도를 평원선 以南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등 북의 대남 군사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침략행위로 남북한이 戰爭狀態 돌입하게 되면 중국의 介入 여부에 따라 전쟁의 전개방식과 종식 형태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사전협약이 없는 대남 전쟁행위에 대해서는 軍事支援을 꺼려할 것이다. 조속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 한국은 중국의 한반도전쟁 不介入 입장, 즉 중립적 입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전쟁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북한의 침략행위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고 북한의 侵略行爲 중지 결의안에 중국이 拒否權을 행사하지 않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軍事的 介入을 단행하면, 남북한간의 전쟁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介入으로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는 국제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韓·美戰時支援協定(WHNS)」, 특히 이 협정의 핵심조항인 제2조에 의거하여 한·미 兩國은 북한을 격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新作戰計劃 5027」의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FDL: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List)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增援軍을 파견하고, 한국은 WHNS협정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반도사태를 조속히 종결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신작전계획 5027」에 의해 전개되는 한·미 兩國의 대북 군사태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신작전계획 5027」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는 戰爭抑制策으로써 미국의 「戰鬥力 增強」(FE: Force Enlargement) 및 신속전개 抑止戰力이 한반도에 배치된다.⁷⁴⁾ 제2단계는 서울 이북지역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북한의 後方基地를 파괴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대규모 美증원부대가 한반도로 파견되어 미군의 휴전선 이북으로의 진격태세를 갖추게 된다.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한반도에 파견되는 美軍의 規模는 더욱 증대되어 미군 병력 50여만명, 항공기 1,600여대, 5개 항공모함 전투단을 포함한 합정 200여척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단계에서는 大規模 上陸作戰이 전개된다. 제4단계에서는 평양을 점령하고 청천강 지역까지 북상하여 북한내 점령지역에 대한 軍事統治를 실시함으로써 한·미 합동군사작전은 일단락 되고, 끝으로 제5단계에서는 한국주도의 統一이 완성된다는 것이다.⁷⁵⁾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중국의 軍事介入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타진하여 중국의 軍事介入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74) 1995년 11월 개최된 한·미 군사위원회(MCM)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신속배치 전력이 대폭 강화된다는 「전투력 증강(FE)」전략을 채택한 바, 이는 기존의 전력에 2개의 항공모함 전단, 1천여대의 항공기 및 상당수의 해병대 원정군병력의 증파를 포함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5. 11. 3.

75) 「조선일보」, 1994. 3. 23; 「동아일보」, 1994. 3. 24; 「세계일보」, 1994. 3. 25.

(3) 北韓崩壞로 인한 韓半島 統一 對備

일반적으로 중국은 北韓崩壞로 인한 한반도 통일실현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며 향후 10년내에는 통일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韓半島 統一過程이 중국의 의사와는 달리 전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사전에 중국측과의 입장조율을 위한 협의가 요청된다. 만일 外勢의 介入이 없는 북한의 내부붕괴로 인한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 통일 미완성 국가인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명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內政不干涉 原則을 견지하고 있어 남북한간의 통일실현에는 직접 介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통일의 실현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統一韓國이 지닐 위상에 대해 우려하여 통일과정의 전개 방식에 따라 自國의 介入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군사력 주도하에 실현될 경우, 중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強壓戰略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⁷⁶⁾ 통일한국이 지닐 位相 중에서 중국이 크게 우려하는 부문은 통일한국의 군사태세와 駐韓美軍의 존속여부 등이다. 첫째, 한국은 統一韓國의 군사태세와 군사력을 현재의 국방력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중국측에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주한미군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駐韓美軍의 단계적 早期

76) Zhao Gancheng, "China's Korean Unification Policy", in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Kyungnam University-American University, 1996. 5), p. 2.

減縮이 실행될 것임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자국을 군사적으로 크게 위협하지 않는 한,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⁷⁷⁾ 한국이 급격한 주한미군의 撤收를 모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미군 철수에 따른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影響力 增大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만하고 조속한 통일실현을 위해 한국은 駐韓美軍 減縮規模와 시기 등에 대해 중국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兩國간의 안보이해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兩者間 安保協力 部門

(1) 韓·中 軍事協力 推進

한·일 군사협력⁷⁸⁾ 양상과는 달리 한·중간의 가시적인 군사협력이 미약한 것은 兩國간에 한반도 및 東北亞 安定에 대한 공동의 목적과 상호 이익에 대한 共感帶가 크게 형성되지 않은 데 연유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측과 高位級 軍인사의 정기적 교류 등 軍事交流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우선 중국과의 국방장관 교환방문을 추진하고 현역군인

77) 중국은 주한미군이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한·미 안보협력체제 발전방향」, 민주평화 시사자료(13), 1996년 5월, p. 39.

78) 1945년 일본의 패망이후 처음으로 1996년 9월 해상자위대 소속 군함 2척이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12월에는 일본 통합막료회의 의장이 한국 국방장관을 예방한 적이 있다.

이 참가할 수 있는 兩國간 安保協議會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한·미 合同軍事訓練과 활동을 사전 통보하고 참관을 허용하여 중국의 불필요한 誤解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有事時를 유념하여 西海상에서의 한·중 합동 해상탐색 및 해난 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 한국은 중국과 군사, 과학·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兩國 합대의 상호 交換訪問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⁷⁹⁾ 또한 한·중 兩國간 安保協力을 활성화하기 위해 駐韓 중국대사와 무관의 지위 격상을 중국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현재 駐北韓 중국대사와 무관의 직위와 비교해 보면 주한 중국대사와 무관의 격은 한 단계 낮은 수준에 있다.

끝으로 한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의 核武器와 전략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韓國防衛가 취약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西海 해상에서의 制海權을 확보한 중국 기동함대는 인천과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중 兩國간의 점진적인 協議가 필요하다.

79)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10, pp. 64~65. 일본은 러시아와 1995년 국방장관 상호방문에 합의하고 합동 해상탐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 대해 현역 군인이 대거 참가하는 양국 안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94년 11월 「공중우발충돌방지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사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1996년 5월 이양호 국방장관이 訪日하여 실질적인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한·일간 군사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朝鮮日報」, 1996. 7. 2.

(2) 中國의 軍事停戰委 代表團 歸還 要請

미국과의 제네바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한은 대미 單獨 平和協定 체결을 위해 停戰協定體制를 파기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 판문점 군사정전위 자국대표단을 철수한 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행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武力挑發 행위는 북한이 한국과의 關係改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자신의 安保威脅을 축소하고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停戰協定の 유효성과 지속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중국 군사정전위 대표단의 판문점 귀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이 自國 代表團을 판문점으로 복귀시킬 수 없을 경우, 한국은 駐韓美軍의 존재가 한반도 안정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해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다. 多者間 安保協力 部門

동남아 지역과는 달리, 東北亞地域에 대해 중국은 現狀維持 정책을 선호하여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간 安保協議體에의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탈냉전이후 동북아 지역의 強大國을 미국, 일본, 중국으로 지적하고 강대국간의 兩者關係를 다자관계보다 더욱 중시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한다.⁸⁰⁾

80) 袁明(북경대 국제관계연구소장), “21세기초 동북아시아의 강대국관계,” 「국제문제연구」, 1996년 4호, 「世界日報」, 1996. 11. 22,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93년부터 미·일·중·러·한국 5國간에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東北亞協力對話(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회의를 1996년 1월 주최한 바 있다.⁸¹⁾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東北亞協力對話」에서는 東北亞安保에 관한 각국의 시각, 각국의 군사적 시각, 상호 안심조치, 東北亞 국가간 관계 규제원칙, 地域經濟協力, 에너지의 전략적 역할 등에 대한 각국의 기본적인 입장표명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큰 진전은 없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정부관리 및 학자들을 개인 자격으로 파견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실행방향을 협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中·美 葛藤이 지속될수록 중국이 동북아 다자 안보협의체 형성에 참여할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정부차원의 東北亞 安保對話의 형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東北亞 安定維持 및 韓半島問題, 특히 북한의 남침 군사능력이나 정치적 의사 등에 관련된 한·중간 軍事·安保協力の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 Paul M. Evans, "Reinventing East Asia: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Regional Order",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Spring 1996), pp. 16~20.

VI. 結 論

한국과 中國이 직면하고 있는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環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중·미간 葛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냉전시 미·소가 구축하였던 勢力均衡 구도를 대체하는 가시적이고도 안정된 安保秩序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域內 安保構造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점이다. 둘째, 미·일 同盟體制 강화로 인한 일본의 域內에서의 역할증대를 우려하는 중국은 러시아와 戰略的 同伴者 關係를 구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중·일간의 軍備競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중·단기적으로 중·러간 戰略協力이 美·日 新安保體制를 충분히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일 同盟體制가 東北亞 國際秩序 형성에 우세한 위치에 있다. 셋째, 한반도에서는 南北韓간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북 간 關係改善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現狀維持를 최우선 전략으로 채택하고 대북한 군사 및 經濟支援과 對한국 군사교류 등을 통한 자국의 영향력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1996년부터 중국은 북한의 안정유지 차원에서 군사 및 經濟支援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군사대표단을 처음으로 한국에 派遣하는 등 한국과 실질적인 軍事交流 및 軍事對話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중 안보관계가 중·북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 단계 낮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남북한 懸案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한국측 입장에 대해 선별적인 지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南北韓 停戰協定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4者會談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북한의 과거 核透明性 확보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妥協만을 강조하여 한국이 지지하고 있는 IAEA 입장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攻擊形 미사일 開發問題에 대해서는 介入조차 꺼려하고 있어 한국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북한핵이나 미사일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安定이 自國의 安保利益에 직결된다고 판단한 데 있다.

향후 中·美간의 갈등이 쌍방간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직접적인 군사충돌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나 緊張狀態는 지속되고 中·일간의 軍備競爭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어 東北亞 안보상황은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남북한관계 개선의 진전을 자국의 對北政策에 확고히 연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미간 갈등도 예상된다.

미국의 對中 전략이 東北亞 및 한반도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그리고 미국의 대북 關係改善 노력이 두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기적으로 中·美 갈등,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 등과 중·장기적으로 미·북 관계정상화, 韓半島 統一 가능성과 동북아 新國際秩序 형성 등에 대비한 對中 安保協力 方向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중 安保協力の 방향은 첫째,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의 중립입장이 확보되고, 둘째,

미·중간 戰略的 非對稱 狀況을 고려한 한국의 대중 안보협력이 대미 안보협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셋째, 한·중간 평화우호조약 체결의 모색과 東北亞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형성에 한·중 兩國의 공동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安保協力의 방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기적인 한·중 軍事交流 및 軍事協議의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하고 정부차원의 東北亞 安保協議體 형성에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북한의 과거핵 透明性 확보를 위해 IAEA 입장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를 확보하고, 판문점 軍事停戰委 중국대표단의 복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북간, 일·북간 關係改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대남 武力挑發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 1961년 체결된 중·북 동맹조약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철폐를 요청하며 한·중간 平和友好條約이 체결될 경우, 상호불가침 조항의 첨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의 對中 安保協力 노력은 한반도의 안정된 관리와 향후의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이며, 兩國관계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金景一. 「한반도통일에 대한 분석 및 중국정책에 대한 사고」. 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1996. 11.
- 김국신. 「미국대통령 및 의회선거 결과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6-09, 1996. 11.
- 김시중.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1996. 10.
- 「남북연합을 위한 기본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 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4者會談의 과제와 접근방향」 세미나, 1996. 5.
- 이동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과 의미」,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6.
- 전동진. 「국제적 평화보장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주변4국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5.
- 통계청. 「중국의 주요경제사회지표」. 1996. 8.
-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4. 5.
-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276호 (96. 4. 13 - 4. 19).
- 평화통일자문회의. 「한·미 안보협력체제 발전방향」. 민주평화 시사자료(13). 1996. 5.

- Allen, Kenneth W./Krumel, Glenn/Pollack, Jonathan D., eds. *China's Air Force Enters the 21st Century* (Santa Monica, California: Rand, 1996).
- Friedman, George and Lebard, Meredith. *The Coming War with Japa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 Garver, John W. *Foreign Re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3).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5/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SIPRI Yearbook, 199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The Future of Nuclear Weapons: Report of the U.S.-Japan Study Group on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fter the Cold War*(Washington, D. C.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5).
-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PO, July 1994).
- Winnefeld, James A. et al. *A New Strategy and Fewer Forces: The Pacific Dimension*, RAND, 1992.

2. 논 문

미국 평화문제연구소 보고서. 「한반도에 위기는 오는가」, 1996. 11.
「신아세아」, 겨울호, 1995.

전성훈. “한반도의 핵문제와 군비통제: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변
화를 중심으로.” 「탈냉전기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
민족통일연구원, 1996. 9.

袁明. “21세기초 동북아시아의 강대국관계.” 「국제문제연구」, 국
제문제연구소, 1996년 4호.

편집실. “북한군의 미사일 개발 실태.” 「북한」, 1996년 11월호.

Chang, Sheng Lin. 「동북아 재래식 군사력 평가」.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발표논문, 1996. 8.

Clark, William Jr. “동북아정세 변화와 미·한 안보협력방안.” 「북
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
개원5주년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Niksch, Lorry A. “미·북 제네바 핵합의 이행과 미·북한 관계.” 국
방대학원, 1996. 2.

Caporaso, James A.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 John
Geral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Chanda, Nayan. “No-Cash Carri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FEER)*, 1996, 10.

- “China’s Policy toward Arms Control and Arms Reduction.”
FBIS-CHI, November 15, 1995.
- Dujarric, Robert. “Toward a Coherent U.S. Policy in Northeast Asia.” *Hudson Briefing Paper*, No. 194, 1996. 6.
- Evans, Paul M. “Reinventing East Asia: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Regional Order.”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Spring 1996).
- Harrison, Selig S.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Four-Power Talks.” a paper presented to a conference on “The Four-Power Talks and the Prospects for Korean Unification.” sponsor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the Institute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Che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ROK, November 29, 1996.
- Harrison, Salig S. “The US-DPRK Nuclear Agreement and the US-ROK Allance: View from Pyongyang.” 경남대학-미국 방전쟁대학 국제세미나발표논문, 1995. 10.
- Holloway, Nigel. “No Ordinary General: U.S. Seeks Cordial Ties with Chinese Militar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6. 12.
- Kim, Samuel S. “The Emerging Northeast Asian Order and the Chinese and Russian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11th U.S. Forum, Arlington, Virginia, August, 1995, 18~20.

Kristof, Nicholas D. "Avoiding 'the Worst'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6. 7. 8.

Kristof, Nicholas D. "U.S. Takes Firm Stance On Troop Levels in Japa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2, 1995,

Lee, Samsung.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 Three-Step Concept of Peace Progres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organized by Kyungnam University-American University, Seoul, Korea, 1996. 5. 22 ~ 5. 23.

Lowenthal, Mark M. "Preventive Diplomacy: Prospect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1993).

Oh, Kongdan. "Security Strategies of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a paper presented for the 11th Annual Conference on Korea-U.S. Security Studies, Seoul, Korea, 1996, 10.

Pederson, Susan M. and Cusak, Michael J. "The Implications of Proliferation in China, Korea, and the Subcontinent." in Ralph A. Cossa, ed.,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Washington, D. 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3).

Plunk, Daryl M. "U.S.-North Korean Relations." testimony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1996. 3.
- Pollack, Andrew. "Japan adds Billions For Basic Research."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6. 6.
- Renwei, Huang. "Tentative Study of US Strategic Choice in the Asian-Pacific Region." *Shijiejingji yanju* (World Economy Study), No. 1, 1994.
- Richard D. Fisher. "China's Purchase of Russian Fighters: A Challenge to the U.S.." *Asian Studies Background*, No. 142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1996. 7.
- Richardson, Michael. "China Seeks to Avoid Ban on Nuclear Tes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2, 1996.
- Schwartz, Benjamin. "Why America Thinks It Has to Run the World." *The Atlantic Monthly*, Vol. 277, No. 6 (June 1996).
- Snyder, Glenn H. "Alliances,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 (Winter, 1991).
- Tyler, Patrick E. "Chinese Denounce Big Nuclear Power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7, 1995.
- Waltz, Kenneth N.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1993).
- Xu, Yi-chong. "Multilateralism in Security." in *National Security and Globalization*. Sejong Institute, July, 1996.

Xue, Mouhong. "The New World Order: Four Powers and One Superpower?" *Beijing Review*, Vol. 38, No. 39. Sept 25-Oct. 1, 1995.

Zhao, Gancheng. "China's Korean Unification Policy." in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Kyungnam University-American University, 1996. 5.

Zhou, Xingbao.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China." 통일원 정세분석실, 1996. 5.

미국방대학원. "Political and Economic Impacts on the North Korean Threat." 「합동군사연구」. 국방참모대학, 1992.

3. 기타

「국민일보」.

「讀賣新聞」.

「동아일보」.

「世界日報」.

「人民日報」.

「朝鮮日報」.

「조선중앙통신」.

「韓國日報」.

중앙통신.

Korea Herald.

Washington Times.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체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應 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96-27 한·일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 96-29 한·중 안보협력 방안 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金日成 死後2年: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日本總選 結果分析
- 96-09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96-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0. 1 ~ 1996.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96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6~1997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統一研究論叢 第5卷 2號(1996.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 96-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6-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研究報告書 96-2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9252, FAX: 235-5270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